

■ 토지시장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 급락했던 지가는 2010년 11월부터 86개월간 소폭의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2017년 한 해 동안 3.88% 올랐다.

2017년 전국 지가변동률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수요 등으로 3.88%(수도권 3.82%, 지방 3.97%) 상승해 2016년 2.70% 대비 1.18%포인트 올랐고,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9%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7.02%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을 주도했고 부산 6.51%, 제주 5.46%, 대구 4.58% 등 개발 호재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해운대구 9.05%, 부산 수영구 7.76%, 경기 평택시 7.55%, 세종시 7.01%, 부산 기장군 7.00%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울산 동구는 1.86% 하락했다. 경남 거제시가 0.33%, 전북 군산시 1.7%, 경기 연천군 1.50% 등으로 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은 곳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7년의 전체 토지 거래량은 총 331만5천 필지, 2천206.1km²를 기록했다. 2017년 1월부터 시행된 주택 공급계약 및 부동산 분양권 실거래 신고 의무화 등으로 2016년 299만5천 필지, 2천176km² 대비 필지 수는 10.7%(면적 기준 1.4%) 증가하며 이전 5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2018년도 주택 가격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 등으로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11월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에너지·자원

■ 에너지전환 정책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내놓았다. 전력수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과거 에너지 정책과 달리 미세먼지와 지진 위험 등 환경과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29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을 통해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폐쇄하고 6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는 석탄발전 감축 계획도 담았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47.2기가와트(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해 2030년까지 58.5GW로 확대할 계획이다. 발전비중을 2017년 원전 30.3%, 석탄 45.4%, LNG 16.9%, 신재생 6.2%에서 2030년 원전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0%로 조정한다는 목표다.

원자력 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에 올라가고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수요 대비 설비가 충분하고 원전 감축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중 경부하대 요금(심야의 싼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력 사용이 많은 기업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전력시장 동향

전력수요가 급증할 경우 사전에 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전력 사용 감축을 지시하는 '수요자원 거래제도'(DR)가 논란이 됐다. 이 제도는 최대전력수요가 많은 겨울과 여름철만을 위해 발전소를 더 짓는 대신 전력 사용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2014년에 도입됐다.

정부는 2017년 여름 탈(脫)원전 정책이 한창 논란이던 상황에서 일부 발전기 고장과 최대전력수요 급증을 이유로 DR 제도를 발동했다. 그러자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 정부가 원전 감축으로 전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려고 기업의 전력 사용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DR 제도가 일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2018년 1월 기업 부담을 줄이고 보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2017년 최대전력수요는 12월 12일 발생한 8만5천133MW로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당시 전력공급능력은 9만6천95MW로 공급 예비율은 13%를 유지했다. 발전설비용량은 11만6천657MW로 2016년보다 8% 증가했다.

■ 유가 동향

2017년 국제 원유시장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수요가 공급을 앞질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세계 석유 수요는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2016년 대비 1.6% 증가한 9천780만b/d를 기록했다. 공급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의 감산 영향으로 2016년 대비 0.4% 증가한 9천730만 b/d에 그쳤다.

원유가격은 OPEC 감산, 수요 증가, 달러 약세 등에 힘입어

2016년 1분기 시작된 상승세를 이어갔다. 두바이유는 1분기 배럴당 52.99달러에서 2분기 49.70달러로 하락했지만,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50.43달러, 59.31달러로 상승했다. 두바이유의 2017년 평균 가격은 53.18달러로 2016년 대비 28.4%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2017년 1월 리터당 1천 507.88원으로 출발했다. 7월 1천438.62원으로 떨어졌지만 이후 연속해서 상승했다. 2017년 연간 평균 가격은 1천491.30원으로 2016년의 1천402.64원보다 6.3% 올랐다. 자동차용 경유의 2017년 연간 평균 가격은 1천282.53원으로 2016년의 1천182.54원보다 8.5% 증가했다.

■ 자원개발 동향

문재인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투자한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11월 29일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 공기업이 그동안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부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목표다. TF는 자원 공기업들의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관리·운영 부실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2008년 이후 외형은 확대됐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총 43조4천억원을 투자해 16조7천억원을 회수, 회수율이 38%에 그쳤다. 확정된 손실액이 13조6천억원으로 투자비의 30%를 넘었다. TF는 3개 자원 공기업의 8개 사업을 우량, 관리, 조정 등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향후 처리 방향을 권고할 방침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 손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 공사의 경우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보였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조만간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통신

정보화정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

대한민국의 정보화 정책과 통신정책을 4년 반 동안 담당했던 옛 미래창조과학부(약칭 미래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사라지고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이름을 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약칭 과기정통부)가 2017년 7월 26일자로 출범했다.

'정보통신'이라는 표현은 옛 정보통신부가 폐지된 지 9년 반 만에, '과학기술'이라는 표현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된 지 4년 반 만에 정부 중앙부처 명칭에서 부활했다. 영문 명칭(약칭)은 미래부 시절의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약칭 MSP)에서 'Ministry of Science and ICT'(MSIT)로 바뀌었다. 부처 홈페이지 주소도 기존의 'www.msip.go.kr' 대신 'www.msit.go.kr'로 변경됐다.

그간 과학계에서는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와 함께 출범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일부 근본주의 개신교 계열의 사이비 과학인 '창조과학'과 같은 표현이 정부 부처, 그것도 과학 담당 부처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었다.

미래부에 있던 실장급 과학기술전략본부가 과기정통부에서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로 격상돼 범부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됐다.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산하 창조경제기획국이 말던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지원 등 창조경제진흥 업무(정원 50명 규모)가 신설 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되면서 과기정통부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나 조직과 업무 분장에 큰 변화는 없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산하에 있던 정보화·통신정책은 과기정통부 제2차관 산하로 대부분 이전됐다. 또 정보화와 통신 정책 중 상당히 큰 부분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는 체제 역시 유지됐다.

■ 유영민 과기정통부 초대 장관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월 11일 오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활짝 웃으며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51년생인 유영민 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이 맡았다.

부산 동래고와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한 유 장관은 1979년 LG전자 전산실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입사했으며, LG전자 최고정보책임자(CIO), LG CNS 부사장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제4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지냈다. 그 후 포스코ICT 총괄사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사장급)을 지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IT 및 경제분야 전문가로 영입돼 디지털통위원장과 부산 해운대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17년 7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임명됐으며 같은 달 26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됐다.